

4·13총선에 대한 시민의식과 평가

- 부산·경남지역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이상철 (밀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갈돈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송건섭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이 글은 4·13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결과와 시민의식을 조사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대상지역은 부산·경남이고 917개의 설문자료를 통계처리 하여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사실(결과)과 의견(의식)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사실분석결과, 선거의 후보자 경쟁률이 4.6:1로 높았으며 후보자 낙선운동과 개인기록공개 등이 후보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후보자의 수가 예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고, 지역구에서는 여성의원들이 5석을 차지했으며, 초선의원들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호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영남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이 거의 독점하는 지역주의가 여전함을 나타내었다.

의견분석결과, 시민관심과 투표율의 저하, 선거에 대한 공정성의 감소, 공무원의 관권개입의 의혹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산·경남지역의 경우 후보자 기록공개 및 낙선운동이 후보자 선택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투표결정에는 직접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번 선거에 지역감정과 상호비방 등이 여전하였고, 선거의 방향으로 선거법의 개정, 지역주의 타파 및 지역분할구도 조장금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관심제고 등을 강조하였다.

I. 서 론

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는 1997년 12월 대통령선거와 1998년 6월 지방선거이후 약 2년만에 치러졌다는 점에서 현 '국민의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그 동안 선거 때마다 문제시되던 지역분할구도 및 지역감정의 벽을 과연 넘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관심이 컸다. 또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후보자의 병역 및 재산세, 전과기록 공개 등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어느 정도 시민에게 호응을 받느냐 하는 점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4·13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양극적(兩極的)이다. 영남과 호남 두 지역에서는 하나의 당이 독차지하는 배타적인 지역감정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수도권과 충부지역에서는 그런 지역감정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총선 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이 성공을 거두는 등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낙선운동은 대상자들의 부패와 반민주적인 경력 등 네거티브(negative)한 자료만 공개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해 결국 짚은 유권자들의 대량 기권을 조장하는 결과를 냥았으며, 지역감정의 두터운 벽을 넘지 못한 한계 등을 가진 선거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4·13총선에 대한 선거결과와 시민평가를 비교·고찰하여 차후 선거에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부산·경남시민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 지역은 오랫동안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야당 지역으로 변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혜택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부산·경남지역의 인식분석으로 다른 지역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II. 4·13총선의 일반적 특징

1. 4·13총선의 의의

1987년을 기점으로 민주화가 본격화됐음에도 정치권은 세계화·탈냉전 등 사회변화와 새로운 이슈에 부응하는 변화와 민주주의 제도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특히 지난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지역주의가 해체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번 총선의 의미도 바로 그 지역주의 극복에 있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제하의 중간선거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4·13총선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선거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합의된 선거법은 현행 2백53곳의 지역 선거구를 26곳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현행대로 46명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체 의원정수는 2백 99명에서 2백73명으로 약 9% 줄게 됐다¹⁾. 특히 여야는 국회의원 및 시·도 의회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이 30% 이상 추천되도록 하는 '여성30% 할당제'를 정당법에 명시했다²⁾.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재산·병력·납세·전과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공약 평가자료집을 내었다는 점이다.³⁾ 이것은 유권자에 대한 자료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점과 유권자가 개인적인 자격으로서 의사표현의 상당부분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셋째, 시민단체의 운동을 들 수 있다. 이에는 경실련을 주축으로 한 정보공개운동과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그리고 공선협의 공명선거운동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이번 총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⁴⁾. 낙천낙선운동은 후보자선정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유권자의 낙천운동이 선거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게 선거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얻었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처음부터 시민호응, 지역감정과 보수언론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가 주된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3개월에 걸친 정치개혁을 위한 총선 시민연대의 활동의 결과〈표 1〉에서 보는 바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조(2000.2.16개정)

2) 정당법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에 '정당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00. 2. 16).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1조에 후보자들의 소유재산, 본인 및 18세 이상의 아들·손자·외손자의 병력사항, 최근 3년간의 재산세 및 소득세 납부실적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후보 전과기록도 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4) 유권자 운동은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의 핵심이자 최고원리인 국민주권원칙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주권행사는 선거를 통해 행사되는데, 그 동안 국민은 후보자 선정과정의 소외, 후보자 완단근거 및 자료의 부재, 후보자에 대한 견종 미흡, 토론 및 표현자유 제한 등의 이유로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같이 전체 낙선후보자 86명 중 68.6%가 낙선했고, 집중 낙선 대상의 68.2%가 떨어지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부동 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수도권에서 낙선훈동이 낙선후보자 명단에 속한 후보들 20명 가운데 19명이 낙선했으며 낙선훈동 대상자의 95.5%가 낙선했고, 충청·강원권은 78.3%, 호남권은 75.0%로 높은 편이나 영남권은 45.7%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지역주의가 강한 영남과 호남지역의 경우 낙선훈동의 효과는 수도권에 비해서 약했지만, 지역정치를 다소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부분적이나마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볼 수 있다.⁵⁾

〈표 1〉 시민단체 낙선훈동(대상자)

전국상황	후보자 수	백분율(%)	22개 집중지역	후보자 수	백분율	집중지역	낙선자/대상자	백분율
총계	86명	100.0	총계	22명	100.0	총계	59명/86명	68.60
낙선자	59명	68.6	낙선자	15명	68.2	수도권	19명/20명	95.5
당선자	27명	31.4	당선자	7명	31.8	충청·강원권	18명/23명	78.3
						영남권	16명/35명	45.7
						호남권	6명/8명	75.0

2 후보자 특징

4·13총선 후보자의 특징을 경쟁률, 성별, 연령별, 학력별 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13총선의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4.6: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98년 6·4지방선거에서의 2.3:1(이상철, 1998)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후보자의 높은 관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후보등록자 1,038명 중 여성후보자는 33명으로 3.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제15대 여성후보 21명에 비하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전체 139명 중 여성후보자가 32명으로 23.0%로 나타났지만 여성할당 3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⁶⁾.

후보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나 전체적으로 5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후보자 중 50대, 40대 후보자가 각각 32.2%, 2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의 경우는 50대가 40.3%, 60대가 28.8%로서 연령층이 비례대표후보자가 지역구후보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 55.1%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이 28.4%로 전체 83.5%가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로 밝혀졌고, 비례대표인 경우 고졸이하가 9.4%, 대졸이상이 90.6%로 지역구 후보자보다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 호남의 경우 민주당 후보 가운데 핵심 낙선 대상자 3명이 모두 무소속 후보에게 패배하여 낙선훈동이 큰 효과를 나타냈다(화순보성, 임실완주, 해남진도). 그러나 부산경남지역에서는 핵심 낙선자가 지역주의 바람으로 오히려 가장 높은 비율로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부산 북, 강서구, 해운대, 기장군, 마산합포, 진주).

6) 여성 비례대표후보자에 대해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43명중 14명)이 32.6%, 한나라당(45명중 10명)이 22.2%, 자민련(31명중 6명)이 29.5%, 민국당(19명중 2명)이 10.2%인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만이 비례대표후보자 '여성할당 30%'를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 후보자의 현황(전국)

후보자 수	성별		연령별						학력별							
	남성	여성	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 이하	50~59세 이하	60~69세 이하	70세 이상	미기재	독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수료	대학원
1,038	1,005	33	35	134	308	334	222	5	11	10	7	16	127	572	33	262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3. 행태적 특징

이번에 치러진 4·13총선 투표율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저인 57.2%로 최종 집계되었다.⁷⁾ 이번 투표율은 가장 최근 전국규모의 역대선거인 6·4지방선거(98.6.4)의 52.6% 보다는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⁸⁾.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과 이반(離反)심리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투표율 저조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20~30대 젊은 유권자층(전체 유권자의 51.8%)의 정치 외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⁹⁾. 이러한 투표율 저조는 선거가 뚜렷한 쟁점이나 정당간 정책의 차별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동기를 주지 못한 채 '그 후보가 그 후보'라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납세·병역·전과는 후보간의 '홈집 내기'식 네거티브 선거운동과 맞물려 도시지역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와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의 경우 을산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균치에 못 미치는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전이 53.3%, 대구가 53.5%로 최하위를 나타내었다¹⁰⁾. 이러한 것은 과거 선거에서 나타났던 투표참여의 행태(도시는 투표율이 낮고 농촌은 높음)가 그대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의 집중 낙선운동지역인 대도시의 투표율이 저조함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 유권자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 가중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투표율의 저조는 큰 문제다. 미국을 제외하면 대체로 80%에 가까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다. 이는 선진국의 한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유권자가 정치적 대안을 갖지 못한 정치위기의 현상이다. 원내교섭단체에 투표한 약 42%정도를 제외하면 60% 정도의 국민이 정치에서 소외됐다는 결론이다¹¹⁾.

7) 1980년대 이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을 보면, 제11대(81.3.25)이 78.7%, 제12대(85.2.12)가 84.7%, 제13대(88.4.26)가 75.8%, 제14대(92.3.24)가 63.9%, 제15대(96.4.11)가 63.9%인 것으로 이번 4·13총선이 최저를 나타냈다.

8) 그러나 그 당시 낮은 투표율은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 기명 투표방식의 영향이 커졌다는 이유 등이 제기되었다(조선일보, 98.6.5; 이상철, 1998).

9) 이들의 투표율은 15대 총선 53%, 14대 64%로 종·장년 층의 평균 투표율 80%에 훨씬 못 미쳤던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는 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 특히 지역색이 떨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87년 대통령선거 때의 지역분할구도가 갈수록 공고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구(53.5%)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집대중(金大中)정부 이후 제도권에 안주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지역정서가 투표 포기 현상으로 그대로 이어졌다(경향신문, 2000.4.14)

11) 특히 20~30대의 투표율 30%는 심각한 문제로 해석된다. 투표율 저하는 정치파인의 결과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 물론 일파성 세력인 학생을 대신해 시민중심의 운동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선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구조적 변화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총선연대가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선거가 가져야 할

〈표 3〉 4·13총선 시도별 투표율(%)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대 총선	57.2	54.3	55.4	53.5	54.0	54.0	53.3	59.1	54.9	62.9	60.8	60.1	60.6	66.8	64.6	60.6	67.2
15대 총선	63.9	61.0	60.5	60.9	60.1	64.5	63.1	63.0	61.5	69.3	68.3	68.7	68.3	69.8	71.7	66.0	71.1
15대 대선	80.7	80.5	78.9	78.9	80.0	89.9	78.6	81.1	80.6	78.5	79.3	77.0	85.5	87.3	79.2	80.3	77.1
98년 지방	52.7	46.9	46.7	46.8	43.2	45.1	44.5	57.6	50.0	64.3	61.0	59.5	57.8	68.2	64.9	61.1	73.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4. 당선자 특징

당선자의 특징을 경력, 성별, 연령, 학력, 정당분포 등의 순으로 살펴보자 한다. 4·13총선에서 당선한 후보자들의 경력을 보면 전직국회의원 출신이 전체 227명 중 118명으로 52.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정치인으로 31.3%, 변호사 8.9%, 기타의 순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국회의원과 정치인 동일하게 37.0%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을 보면 남성이 전체 98.7%, 여성이 2.3%로 남성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여성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수가 지난 번 선거에 비해 많이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15대 총선 때는 21명이 출마해 2명이 당선했지만 13대 때는 13명, 14대 때는 19명이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조선일보, 2000.2.10). 비례대표의 경우 전체 46명 중 남성이 76.1%(35명), 여성이 23.9%(11명)로 '여성 할당 3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가 각각 38.3%, 29.5%로 가장 많다. 그리고 30대가 5.7%로 386세대의 약진이 돌보이는데, 이는 15대 국회 때의 8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¹²⁾.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92.5%, 고졸이하가 7.5%로 학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원 졸업의 고학력자도 26.4%나 차지해 유권자들이 고학력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당선자의 현황(전국)

지역구 당선자	연령별								학력별							
	남성	여성	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 이하	50-59세 이하	60-69세 이하	70세 이상	미기재	독학	초졸	중졸	고졸	대학	대학원 수료	대학원
227	222	5	0	13	60	87	67	0	0	0	1	2	14	145	5	6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한편 정당별로 보면,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국 273석 중에서 전체 227석 중 야당인 한나라

정책·이념경쟁이 나타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30대가 13명(5.7%)으로 15대 때 7명(2.8%) 보다 비율상으로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30대가 늘어난 것은 수도권에서 '386세대' 둘풍 때문이다. 이어 40대가 60명(26.4%), 50대가 87명(38.3%), 60대가 67명(29.5%)으로 집계됐다. 15대 때는 40대가 54명(21.3%), 50대가 1백42명(56.1%), 60대가 50명(19.8%). 한편 이번 당선자 중에는 전직 민선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지방선거가 중앙정치 무대 진출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선 기초단체장 출신의 당선자는 모두 6명으로 15대 때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변화다. 또 전직 시·도의원 출신도 11명이 당선판 15대 때 6명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리고 전체 2백73석 중 초·재선 의원수가 1백93명으로 70%에 달한다.

당이 133석(58.6%)으로 제1당이 되었고, 여당인 민주당이 42.1%로 제2당이 되었다. 특히 야당은 부산·경남, 대구·경북에서 거의 차지하였고, 여당은 광주·전남, 전북 등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역대 선거에서 논란을 거듭했던 지역분할 구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당선자의 지역별 정당 분포 및 특성

구분	총합계	비례대표	지역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의원정수	273	46	227	45	17	11	11	6	6	5	41	9	7	11	10	13	16	16	3
한나라	133	21	112	17	17	11	5	0	1	4	18	3	3	0	0	0	16	16	1
민주	115	19	96	28	0	0	6	5	2	0	22	5	2	4	9	11	0	0	2
자민련	17	5	12	0	0	0	0	0	3	0	1	0	2	6	0	0	0	0	0
기타	8	1	7	0	0	0	0	무1	0	무1	0	국1	0	신1	무1	무2	0	0	0

자료 : 조선일보(2000.4.15).

주 : 1) 기타 총합계는 민국당2, 한국신당1, 무소속5임(기타 비례대표는 민국당1임)
2) '국'은 민국당, '신'은 한국신당, '무'는 무소속.

III. 4·13총선에 대한 부산·경남시민평가

1. 표본설계 및 구성

본 연구의 표본은 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의 유권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선거 다음날인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은 아니고, 부산·경남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주된 조사지역은 밀양, 부산, 마산, 창원, 김해, 창녕, 울산 등이다. 질문지는 전체 1000매를 배포하여 940매를 회수하여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총 91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회수율 91.7%).

연구의 방법은 질문지법(Questionnaire method)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질문지 구성은 크게 네 부분을 구성하였는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6문항, 4·13총선에 대한 시민의 의식 5문항, 후보자에 대한 의견 6문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판관개입과 관련 질문 2문항, 후보자 공개와 낙선운동 5문항, 선거행태에 관련한 질문 10문항 등 총 34문항이다.

조사분석은 spss(win)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기초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4·13총선에 대한 시민의 차이를 검증(가설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간의 차이검증 방법인 t검증, 그리고 3개 이상의 여러 집단간의 차이검증인 f검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변수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을 중심으로 의미를 부여하였지만, 연구의 목적상 유의성이 낮아도 일부분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자의 특성

〈표 6〉는 설문지 응답자의 특성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응답자의 남녀 성비율이 52.3% 대 47.7%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많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20대가 30.6%, 29.2%로 가장 많고, 다음이 40대와 50대 이상으로 연령별 다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거주기간별로 보면, 30년 이상이 25.2%, 10년 미만이 29.2%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거주기간이 오래 될수록 지역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어 후보자 선택이 그 만큼 용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직업은 다양하지만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대별하여 보았는데, 공무원이 22.7%, 비공무원이 77.3%로 나타났다¹³⁾.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32.3%, 대졸(전문대졸 포함)이상이 67.7%로 유권자의 학력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은 중간층이 56.8%로 가장 많고, 중하이하가 28.9%, 중상이상이 14.0%로 나타났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480	52.3	직업	공무원	208	22.7
	여성	437	47.7		비공무원	696	77.3
연령수준	20대	268	29.2	교육수준	중졸이하	107	11.7
	30대	281	30.6		고졸	295	32.2
	40대	215	23.4		전졸(대체)	286	31.2
	50대 이상	153	16.7		대학이상	229	25.0
거주기간	10년미만	268	29.2	생활수준	중상이상	128	14.0
	10~20년 미만	186	20.6		중	516	56.8
	20~30년 미만	223	24.6		중하이하	265	28.9
	30년 이상	228	25.2				

3. 총선에 대한 시민관심과 평가

1) 시민관심

이번 4·13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일반유권자의 선거무관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선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실제 부산·경남지역 시민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4·13총선 관심에 대해 Likert에 의한 5점 척도(매우 낮다-1점, 낮다-2점, 보통-3점, 높다-4점, 매우 높다-5점)로 평가하였다. 전체적 평균을 보면 2.84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민의 관심이 ‘대체로 낮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이번 투표율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투표율이 낮은 것은 선거의 무관심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표 7〉에서는 4·13총선에 대한 시민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선거관심도에 대해 우선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간의 차이검증 방법인 t검정 결과 $t=2.325$ 이고 $p<.05$ 므로 남성이 여성보다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13) 비공무원 직업을 좀더 세분화시켜 보면, 전문직이 11.7%, 주부가 15.5%, 1차(농업 등) 산업종사자가 6.2%, 2차(제조업 등) 산업종사자가 5.5%, 3차·4차(서비스/정보) 산업종사자가 13.1%, 기타가 24.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 있다. 다음은 세 집단간의 차이검증방법인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관심정도를 측정하였다. 거주기간은 한 지역에서 오래 생활한 응답자가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p<.05$), 교육수준은 높은 응답자 보다 낮은 응답자일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1$). 연령은 20대의 낮은 자와 50대이상의 높은 자가 30-40대 응답자보다 관심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표 7〉 선거의 관심정도에 따른 차이비교

구 분	N	평균(MD)	표준편차(SD)	t/f값	유의확률(p)
성별	남성	480	2.92	1.00	2.325 .020
	여성	437	2.76	1.01	
거주기간	10년 미만	268	2.68	1.01	3.715 .011
	10-20년미만	186	2.90	.98	
	20-30년미만	223	2.91	1.01	
	30년 이상	228	2.96	1.01	
교육수준	중졸이하	107	3.15	1.08	4.414 .004
	고졸이하	295	2.84	.97	
	전졸(대재)	286	2.83	1.02	
	대학이상	229	2.72	.98	
연령정도	20대	268	2.82	1.08	6.364 .000
	30대	281	2.74	.94	
	40대	215	2.79	.99	
	50대 이상	153	3.16	.97	

2) 총선에 대한 전체적인 시민인식평가

4·13총선에 대한 행태를 사실적인 측면, 즉 후보자 및 당선자의 학력·연령·성별·직업 등에 서 설명을 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선거분위기의 원인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선거과정에서 시민의 규정준수 정도이다.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위법, 탈법, 규정에 어긋난 행위이다¹⁴⁾. 이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선거운동의 규제는 선거법개정(2000.2.16)으로 예전보다 다소 완화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다. 총선의 규정준수 정도에 대해 역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전체 평균이 2.78로 높지 않다. 이를 생활수준별로 차이검증을 실시하면,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규정준수를 잘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둘째, 선거의 공정에 대한 조사결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부수립 후 수십 번의 선거가 있었지만 공정한 선거라고 평가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번 선거도 공정성 정도가 3점 이하로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정도가 낮거나 높은 응답자가 그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총선 선거운동 종료일인 12일까지 모두 2834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 중 221건을 고발하고 354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 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는 15대 총선 때 741건의 무려 4배에 달하는 것이다(조선일보, 2000.4.13). 또 4·13총선 과정에서 빛어진 과열 혼탁 선거전의 여파로 76명의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 및 내사가 본격화되고 이들 중 일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여 재선거 등의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4월 14일 16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검찰의 수사나 내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는 76명으로 전체 당선자 273명의 27.8%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수사대상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는 한나라당 35명, 민주당 35명, 무소속 3명, 자민련 3명이다(동아일보, 2000.4.14).

렇지 않는 응답자보다 공정성 정도가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8〉 시민인식 차이비교

구분		N	평균(MD)	표준편차(SD)	f값	유의확률(p)
총선의 규정 준수정도	생활 수준	중상이상	127	2.95	.82	10.303 .000
		중	513	2.82	.75	
		중하이하	259	2.60	.85	
총선의 공정성 정도	교육 수준	중졸이하	106	2.99	.91	2.119 .096
		고졸	291	2.86	.86	
		전졸(대체)	285	2.76	.82	
		대졸이상	228	2.90	.94	
시민성숙도 정도	연령 정도	20대	266	2.77	.87	2.547 .050
		30대	280	2.78	.86	
		40대	213	2.92	.89	
		50대 이상	153	2.95	.85	
선거의 축제 분위기 정도	거주 기간	10년 미만	267	2.28	.89	3.673 .012
		10~20년 미만	184	2.48	.97	
		20~30년 미만	220	2.54	.95	
		30년 이상	228	2.50	.98	

셋째, 시민성숙도의 정도에 대해서도 '보통이하'로 낮게 나타나는데 선거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시민성숙도는 높다고 응답함으로써 연령에 따라 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선거는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의 행태로 모두 참여하여 축제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축제분위기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평균이 2.45로 나타났고, 이를 거주기간별로 보면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지 아니한 자일수록 그 정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후보자에 대한 시민인식평가

이번 4·13총선에서 후보자들은 어느 선거 때보다 많은 자질 검증을 거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민단체의 낙천운동, 후보자의 재산 및 병력사항 공개, 후보자 등록 후에는 전 과기록 공개, 선거운동기간 중에 시민단체의 후보자 낙선운동 등이다. 이와 맞물려 각 당에서 '젊은 피 수혈론'을 내세워 젊고 유능하고 젊은 새 인물을 후보자로 내세우는 조치를 취했다.

부산·경남 시민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태도를 설문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여 보았다.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후보자의 교육, 경력, 정치적 자질, 민주의식수준, 참신성, 신뢰성 정도 등 6분야로 평가하였다.

우선 후보자의 교육정도에 대해서는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은 교육수준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후보자의 경력정도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였는데, 공무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후보자의 경력을 보다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p<.05$). 후보자의 정치적 자질에 대해서는 '보통이하'로 평가하고 있는데, 거주기간이 오래 되지 않은 응답자일수록 후보자 정치적 자질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p<.001$). 후보자의 민주의식수준에 대해서도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낮

게 평가하고 있고($p<.001$), 후보자의 참신성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이 낮은 자일수록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후보자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p>.05$), 남성과 여성 모두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후보자에 대한 시민인식평가

구 분		N	평균(MD)	표준편차(SD)	f값	유의확률(p)
후보자의 교육정도	교육 수준	중졸이하	107	3.71	4.870	.002
		고졸	295	3.54		
		전졸(대체)	285	3.42		
		대졸이상	229	3.45		
후보자의 경력정도	직업	공무원	298	3.32	2.349	.019
		비공무원	691	3.19		
후보자의 정치적 자질	거주 기간	10년 미만	268	2.59	6.169	.000
		10~20년 미만	185	2.72		
		20~30년 미만	222	2.81		
		30년 이상	227	2.90		
후보자의 민주의식 수준	연령 정도	20대	267	2.52	7.500	.000
		30대	280	2.66		
		40대	213	2.68		
		50대이상	151	2.92		
후보자의 참신성 정도	생활 수준	중상이상	128	2.66	3.852	.022
		중	512	2.55		
		중하이하	265	2.41		
후보자의 신뢰성 정도	성별	남성	479	2.49	.921	.357
		여성	437	2.44		

4) 정치적 중립성과 관권개입에 대한 평가

어떤 선거이든 공무원은 선거에 대해 엄청한 중립을 지켜야 하며, 관권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공무원은 국민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이 노출되면 선의의 국민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무원집단이 우수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정보를 얻은 집단을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선거자체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4·13총선에 대해 부산·경남시민은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시민에게 '선거에 대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도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약한 편'이 28.8%정도이고, '강한 편'이 26.7%로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들은 다소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 비공무원 집단의 견해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공무원 집단은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54.3%가 강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비공무원 집단은 18.9%만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chi^2=116.615$ 이고,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표 10〉 직업에 따른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견해

구 분	매우 약함	대체로 약함	보 통	대체로 강함	매우 강함	합 계
공무원	4(1.9)	23(11.1)	68(32.7)	76(36.5)	37(17.8)	208(23.1)
비공무원	44(6.3)	189(27.2)	330(47.6)	108(15.6)	23(3.3)	694(76.9)
합계	48(5.3)	212(23.5)	398(44.1)	184(20.4)	60(6.7)	902(100.0)

$\chi^2=116.615$ 자유도=4 유의성 = .000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정도를 부산·경남시민에게 설문하여 보았다. 공무원의 관권개입정도에 대해 공무원은 '약함'이 41.8%로 나타났고, 비공무원 집단은 '약함'이 33.2%로 나타났다.

공무원 집단과 비공무원 집단간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46.950$, 유의성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로서 공무원 자신은 관권개입에 대해 그 정도가 약한 편이라고 응답하지만, 비공무원 집단은 그 정도 면에서 공무원 집단보다 개입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직업에 따른 관권개입정도에 관한 견해

구 分	매우 약함	대체로 약함	보 통	대체로 강함	매우 강함	합 계
공무원	47(22.6)	40(19.2)	78(37.5)	33(15.9)	10(4.8)	208(23.2)
비공무원	48(7.0)	181(26.2)	341(49.4)	100(14.5)	20(2.9)	690(76.8)
합계	95(10.6)	221(24.6)	419(46.7)	133(14.8)	30(3.3)	898(100.0)

$\chi^2=46.950$ 자유도=4 유의성 = .000

5) 정부의 후보자 기록공개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한 영향

정부는 후보자에 대한 병력, 납세, 전과기록 등을 공개함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시민단체에서는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부산·경남 시민의 영향의 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5개의 설문항목을 5점척도(전혀 영향 없음-1점, 보통-3점, 매우 큰 영향-5점)로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우선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병역의혹이 3.51점¹⁵⁾, 납세의무불이행이 3.71점¹⁶⁾,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3.55점, 일반전과기록이 3.84점, 민주전과기록 3.19점으로 나타났는데,¹⁷⁾ 전체

15) 여성당선자(5명)를 제외하고 병역면제를 받은 당선자는 56명(25.2%) 이었다. 일반인의 평균 병역면제비율(4.3%) 보다 6배나 높은 수치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도 20명이나 됐다. 자민련엔 미필자가 한 명도 없었다(중앙일보, 2000.4.14)

16) 재산세와 소득세를 합쳐 최근 3년 동안 1백 만원 미만의 세금을 낸 당선자는 22명, 전체의 0.9%다. 지역구 출마 후보(1천38명) 중 납세액 1백 만원 미만 후보가 3백85명(37%)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아진 수치다. 때문에 납세실적이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3년간 한번도 소득세를 낸 실적이 없는 당선자는 7명, 재산세 납부실적이 전무한 당선자는 40명이었다. 이중 재산세·소득세를 모두 '0원' 신고한 '무세(無稅) 당선자'는 4명(1.7%)이다. 후보 등록 때는 1천38명 후보 중 1백38명(13%)이 '0원' 행진을 벌였다(중앙일보, 2000.4.14).

17) 전과공개에 대해 당선자의 14%인 32명이 금고(禁錮) 이상의 전과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구 후보 대비 전과자 비율(16%)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21명, 한나라당이 11명인 반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당선자 중엔 전과자가 없었다. 이를 대부분이 시국사진에 연루된 시국·공안사범인 것으로 나타나 민주전과가 후보의 당락엔 적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측됐다(중앙일

적으로 영향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일반전파기록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병역의혹($p<.01$), 납세의무불이행($p<.05$), 시민단체의 낙선대상자($p<.01$), 일반전파자($p<.001$), 민주전파자($p<.05$) 등 전체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후보자의 기록공개와 낙선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표 12〉 교육수준에 따른 후보자 개인기록 공개 및 낙선운동에 대한 영향비교

구 분	N	평균(MD)	표준편차(SD)	f값	유의확률(p)
병역의혹	중졸이하	107	3.21	1.17	5.484 .001
	고졸	294	3.44	1.13	
	전졸(대재)	286	3.57	.90	
	대졸이상	229	3.67	.99	
납세의무 불이행	중졸이하	107	3.54	1.14	3.286 .020
	고졸	292	3.64	1.07	
	전졸(대재)	286	3.72	.97	
	대졸이상	228	3.87	1.01	
시민단체의 낙선대상자	중졸이하	107	3.30	1.01	5.792 .001
	고졸	286	3.46	1.02	
	전졸(대재)	285	3.60	.90	
	대졸이상	229	3.72	1.00	
전파자 I (일반)	중졸이하	106	3.50	1.08	7.287 .000
	고졸	292	3.75	1.17	
	전졸(대재)	286	3.91	.96	
	대졸이상	229	4.03	.96	
전파자 II (민주)	중졸이하	107	2.92	1.05	2.580 .050
	고졸	294	3.19	1.16	
	전졸(대재)	285	3.26	1.08	
	대졸이상	229	3.23	1.13	

연령별로 살펴보면 시민단체의 낙선대상자($p<.01$), 일반전파자($p<.05$), 민주전파자($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연령수준이 낮을수록 후보자의 기록공개 및 낙선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사항은 이러

보. 2000.4.14).

- 18) 16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친 세로운 변수는 '후보 납세 병역 재산 공개', '시민단체 낙선운동대상 선정', '남북 정상회담 합의 발표'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이에 대한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R&R)의 총선 사후 여론조사 결과 후보신상공개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16.3%,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24.9%로 나타나 총 41.2%의 응답자가 영향권 내에 들었다. 후보자 신상공개가 유권자에게 미친 영향을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에 접전을 벌인 서울에서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는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49.5%가 '영향을 받았다'고 답해 전국 평균치보다 8.3%나 높았다. 또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후보 신상공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후보 신상공개의 3가지 항목인 '납세', '병역', '전파기록' 등 공개의 영향력을 납세가 40.8%로 가장 컼고, 병역(29.1%), 전파(26.6%) 순으로 나타났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도 서울에서 가장 큰 영향(43.1%)을 미쳤고, 인천 경기에서는 32.5%가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지역은 큰 편차가 없이 32-37%대를 기록했다(동아일보, 2000.4.14.).

한 것이 오히려 젊은 층으로 하여금 '정치 냉소주의'를 점점 더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20-30대의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고, 기권 층을 증가시켰던 동인(動人)이 되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낙선·낙선운동을 계기로 한때 네티즌과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 투표참여 운동이 불을 이루기도 했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지지 않는 거품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셈이다.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권리의 행사하는 투표행위를 '촌스럽다'거나 '유행에 뒤떨어지는 일로 여기는 젊은 유권자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의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표13〉 연령에 따른 후보자의 기록공개 및 낙선운동에 대한 영향비교

구 분	N	평균(MD)	표준편차(SD)	t값	유의확률(p)
병역의혹	20대	268	3.58	.97	1.994 .113
	30대	281	3.58	.98	
	40대	214	3.44	1.11	
	50대 이상	153	3.37	1.15	
납세의무 불이행	20대	268	3.76	.97	.975 .404
	30대	280	3.76	1.05	
	40대	212	3.64	1.10	
	50대 이상	153	3.64	1.04	
시민단체의 낙선대상자	20대	268	3.57	.91	4.049 .007
	30대	278	3.69	1.00	
	40대	211	3.46	1.06	
	50대 이상	152	3.38	.96	
전파자 I (일반)	20대	266	3.91	.91	3.052 .028
	30대	281	3.93	1.05	
	40대	213	3.79	1.15	
	50대 이상	153	3.63	1.14	
전파자 II (민주)	20대	268	3.33	1.07	2.554 .045
	30대	280	3.20	1.11	
	40대	214	3.07	1.16	
	50대 이상	153	3.10	1.13	

6) 선거형태분석

선거에서 당선여부는 후보자의 장점을 얼마나 유권자에게 공정적으로 호소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에는 거리유세, 호별방문, 팜플렛, 개인 및 친인척을 통한 운동 등이 주요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이고 언론매체, 뉴미디어를 통하여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전파매체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

이번 4·13총선에는 선거운동원수의 감소, 거리유세를 줄이고, 현수막폐지, 선거비용의 제한 등으로 이전 보다 더욱 폭넓게 TV토론을 통한 정체대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부산·경남시민에게 후보자결정의 참고사항을 묻는 질문에 '개인판단'이 42.5%로 가장 높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별도의 선거운동에서 영향을 받았다고보다는 이미 후보자를 결정한 유권자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이 '선거관련 신문·방송보도'로 18.3%, 'TV토론'이 10.5%, '선거벽보·팜플렛'이 9.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선 '개인적 자질'이 27.5%와 '정당'이 25.6%로 나타났는데, 유권자의 후

보자결정에 후보자의 자질을 보고 결정하는 개인판단뿐만 아니라 정당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후보자 결정의 참고사항 및 직접적인 영향

구 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TV토론	96	10.5	정책제시(공약)	91	9.9
개인판단	390	42.5	개인적 자질	252	7.5
선거 벽보·팜플렛	89	9.7	학연·혈연·지연	69	6.9
선거관련 신문·방송보도	168	18.3	정당	235	25.6
주변권유	43	4.7	후보자의 친선성	133	14.5
선거유세	55	6.0	병역·납세·전과기록	35	3.9
기타 및 무응답	76	8.3	공천 및 낙선대상자	26	2.8
합계	917	100.0	기타 및 무응답	76	8.2
			합계	917	100.0

이러한 결과는 투표대상 결정시기와도 관계된다. 실제로 후보자 결정에 대해 '선거기간 이전부터'라고 응답한 자가 전체 41.4%로 가장 많다¹⁹⁾. 즉 후보자의 기록공개 및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전에 이미 많은 유권자가 투표대상을 지정했고, 부산·경남에서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오히려 그들의 결정을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해선 '영향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자는 25.5%이고, '영향이 있었음'이 37.8%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정적인 영향을 줌'이라고 응답한 자는 6.7%에 불과하므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²⁰⁾.

〈표 15〉 투표대상 결정시기 및 낙선운동 영향

구 分	빈도	비율(%)	구 分	빈도	비율(%)
선거기간 이전부터	380	41.4	전혀 영향 없었음	35	3.8
후보자 개인의혹공개후	175	19.1	영향 없었음	199	21.7
공천·낙선대상자 발표 후	198	21.6	그저 생각은 해보았음	274	29.9
전과기록 공개후	41	4.5	영향이 있었음	347	37.8
투표포기	110	12.0	결정적인 영향을 줌	61	6.7
무응답	13	1.4	무응답	1	0.1
합계	917	100.0	합계	917	100.0

19) 4·13 총선에서 맨 처음 마음먹었던 후보를 중간에 바꿨다는 사람이 전체의 2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음부터 마음먹었던 후보를 썹었다는 응답자는 75.3%였다.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후보를 중간에 바꿨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대전·충청에서 28.6%로 집계돼 호남(23.1%)과 대구·경북(22.3%)보다 높았다. 후보 결정 시기에 대해 총선한달 전부터 결정했다는 사람이 35.4%로 가장 많았고, 2~3일 전(21.5%), 투표 당일(14.8%), 4~7일 전(13.9%), 10일쯤 전(7.3%), 20일쯤 전(4.6%)순이었다(조선일보, 2000.4.14).

20)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 13일 투표 마감 후 전국의 성인 2174명을 상대로 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후보를 결정하는 데 병역·납세·전과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41%가 영향을 줬다고 했고,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서는 4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답변은 각각 46%, 42%였다. 특히 화이트 칼라 계층에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47%, 52%가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조선일보, 2000.4.14). 이러한 것은 부산·경남지역의 유권자의 응답과는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감정'으로 38.3%가 응답하고 있다²¹⁾. 그 다음으로 '상호비방'이 21.0%, '시민들의 무관심'이 19.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후 선거에 대한 보완사항으로서는 후보자의 '정책위주의 대결'이 33.5%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시민단체의 활동 인정'이 23.6%²²⁾, '개인신상공개 철저'가 19.0%, '선거법개정'이 16.1%로 나타났다.

〈표16〉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 및 보완사항

구 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지역감정	350	38.2	선거법 개정	143	16.1
금전·관권개입	86	9.4	개인신상공개 철저	174	19.0
상호비방	193	21.0	시민단체활동 인정	216	23.6
후보자들의 난립	65	7.1	선거축제분위기 조성	48	5.2
시민들의 무관심	180	19.6	정책위주대결	307	33.5
기타 및 무응답	43	4.7	기타 및 무응답	29	3.2
합계	917	100.0	합계	917	100.0

IV. 분석결과 및 결론

이 글은 4·13총선에 대한 평가를 투표결과(事實)와 시민(유권자)의 의식(意見)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하였다. 따라서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와 해석을 위주로 하여 객관성이 보장되나, 시민의 인식은 부산·경남이라는 지역에 한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인 평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강하게 나타났고,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 개인기록공개 등이 지역마다 동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다소 타 지역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후 지역과 선거와 관련한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앞의 조사분석에서 밝혀진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13총선에서 행해진 후보자 낙선운동과 개인기록공개 등이 후보자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낙선대상 후보자의 68.8%가 떨어졌고, 이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기록공개 등도 후보자 결정의 중요한

21) 4·13 총선에서는 지역감정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 밀어주자'는 소(小) 지역주의도 기승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2~4개의 시·군이 한 선거구가 된 복합선거구에서 그런 양상이 뚜렷했다. 유권자수가 많은 곳 출신이 유리했다. 경남 밀양·창녕에서는 김태랑 후보(민주당)가 고향 창녕에서 5천여표 앞섰으나, 김용갑 후보(한나라당)의 출신지인 밀양에서 3만3천여표 뒤져 낙선했다. 민주당 기반지역인 전남 보성·화순에서도 '보성사람' 박주선 후보(무소속)가 75.9%의 압도적 표를 받아 화순에서 50.8%를 얻은 한영애 후보(민주당)를 앞질렀다.

22) 16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주도해온 총선연대가 2000년 4월 21일 공식 해산했다. 지난 1월 12일 '부·폐·무·능 정치권을 유권자의 힘으로 개혁하자'고 선언한 지 1백일 만이다. 총선연대는 21일 대전 세종대산에서 전국 9백81개 지역·부문 단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해단식에서 '국민의 정치 불신과 무관심을 깨고 유권자가 부·폐·무·능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힘을 확인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앞으로도 이번 낙선운동의 성공적인 성과를 토대로 부문별·사안별 연대를 통한 사회개혁에 적극 나설 계획이어서 시민운동이 향후 사회변화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총선일보, 2000.4.21).

변수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57.2%로 저조하였는데, 후보자의 낙선운동과 기록공개 등이 투표율을 저하시킨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둘째, 4·13총선 후보자의 특징을 보면, 경쟁률이 4.6:1로 높았고, 여성후보자가 수가 예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당별 제31조에 명시된 비례대표여성후보자에 대한 '여성할당 30%'비율이 여당을 제외한 다른 당에서는 지켜지지 않아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 여성후보자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연령층이 30대의 '386'세대들이 정치개혁의 가치를 들고 대거 후보자로 출마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4·13총선의 당선자를 분석하면, 여당의 참패, 지역구에서 여성의원들이 5석을 획득하였고, 학력이 높아지고, 전직이 정치인인 자가 대거 당선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선의원의 수가 증가되었고, 호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영남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이 거의 독식하는 지역주의가 여전함을 나타내었다.

넷째, 4·13총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보면, 투표율의 저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5점 만점에 평균 2.84로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이번 선거기간중의 선거에 대한 인식이 다소 규정에 어긋나고, 공정성이 떨어지고, 시민자신의 덜 성숙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관권개입은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치적 중립성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후보자에 대한 기록공개 및 낙선운동이 유권자의 후보자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은 하고 있으나, 부산·경남지역의 경우, 투표결정에는 직접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선거의 문제점으로 지역감정과 상호비방 등이 여전하고, 선거법의 미흡, 투표율 저조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및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선거법이 다소 규제적이고 원내 정당에 유리하게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이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도 공평하게 허용돼야 하며 동시에 시민단체들도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시민운동의 효과와 절박함으로 인해 총선 연대로 결집됐지만, 앞으로의 시민운동은 각자 그들의 전문분야를 발판으로 다양한 소리를 내는 개혁운동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운동이 되어야 선거에 관한 시민단체활동이 낙선운동뿐 아니라 공명선거를 지키는 고수꾼 역할 등 다양한 형태의 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지역주의 및 지역분할 문제는 반드시 척결해야 될 문제로 보인다.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이 한 석을 빼놓고는 전체 65석 가운데 64석을 차지했고 호남에서는 무소속 후보 네 명을 제외하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정치왜곡과 개혁의 걸림돌임을 생각할 때,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의와 지역분할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과제이다.

참 고 문 현

김순온. (1995).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정치의 과제와 발전방향, 「지방의정」, 동의대지방의회 연구소, pp.5-26.

신광영. (2000). 4·13총선과 낙천낙선운동: 통계적 분석, 4·13총선과 낙천낙선운동 평가토론회(4.14).

이상철. (1998). 6·4지방선거평가, 「한국행정논집」 제10권 제3호.

이상철·송건섭. (1998). 기초의회의 의정활동분석과 주민의 만족도 조사, 「한국지방자치학회 보」, 제10권 제2호.

정대화. (2000). 한국의 정치개혁과 낙천·낙선운동, 4·13총선과 낙천낙선운동 평가토론회(4.14).

경향신문(2000.4.13-14)/동아일보(2000.4.11-15)/조선일보(2000.4.12-15)/중앙일보(2000.4.13-14)

한국일보(2000.4.13-14)/한겨레신문(2000.4.14-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election_info.

인터넷 연합뉴스 정치-정당/선거, <http://www.yonhapnews.co.kr/news>.

이상철: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기획과장을 거쳐 현재 밀양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로는 공기업, 공공정책이며, 논문과 저서로는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민영화방안의 타당성 검토", "개임이론적 접근에 의한 전력요금결정사례분석", "공무원 부패의 영향요인과 방지전략", [공기업강의], [공기업과 정부규제정책], [알기쉬운 경영용어해설] 등이 있다.

제갈돈: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The Intervention Impact of U.S. Supreme Court Decisions on Civil Lawsuits by Public Employees, 1990), 현재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정책평가와 연구방법론이며, 논문과 저서로는 "Public Administration by Lawsuit", "간여시계열분석을 이용한 안동댐의 기상영향평가", "경찰력 억제와 범죄억제간 인과관계의 분석", [간여시계열 실현과 분석], [변형함수분석] 등이 있다.

송건섭: 경북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감사원 감사판단기준의 변화과정과 방향, 1997), 현재 경북대·대구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관리과학, 행정통계, 조사방법론 등이며, 논문과 저서로는 "감사원 감사판단기준의 변화추이분석", "지역사회의 치안수요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신뢰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행정이론과 해설] 등이 있다.